

한국의 국민형성과 ‘가족주의’의 정치적 재생산

한국전쟁 좌익 관련 유가족들의 생애체험 및
정치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김명희*

성공회대학교

〈논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 현대 사회의 가족주의가 약화되지 않고 재생산·강화된 과정과 원인을 국민형성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의 결과, 먼저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가족 단위로 구속·제한하는 기제로 국가 보안법과 반공규율, 신원조회와 연좌제, 가부장적 가족법이 결합된 분단국가의 시민권의 작동방식을 지적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가족신분제로 개념화했다.

각 사례들의 정체성 구성과정을 살펴보면, 국가 정당성 및 도덕성의 문제가 한국의 가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재생산하는 지배적인 인과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도덕적·방어적·정치적·저항적 가족주의의 유형적 사례들은 공(公)을 상실한 근대국가, 연고주의 국가의 체험을 연속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없음, 국가 불신, 도구적 국가, 분열된 국가, 미완의 국가’ 정체성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줬다. 따라서 한국의 현대 가족주의는 왜곡된 국가에 반(反)작용한 가족들의 정치의 결과이며 통상의 근대 국가에게 부과된 정치적·경제적·도덕적 기능의 부재를 가족이 보완, 대체하면서 나타난 보상이념이자 일종의 저항담론으로서의 유동적 성격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국면에서 가족주의의 변화는 두 가지 경향성을 내장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왜곡된 국가’가 정상화되는 국면, 즉 국가가 점

차 그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적 권리의 확장과 국민정체성이 확립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가족중심적 정체성이 약화·이완·재구성되는 경향성이 존재하는 한편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남북한 간의 전쟁상태 및 '가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호명하는 탈이념적 국가의 정치담론과 접합되어 오히려 강화된 시장질서와 맞물려 재생산되는 경향성도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가족을 둘러싼 구조와 제도적 조건들, 국가 자체가 갖고 있는 정당성, 그리고 이와 상호작용하는 가족성원들의 역사적 체험과 정치의식의 복합적인 전개과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식민지 근대의 역사적 구성물로서 가족주의 행위동학과 잠재력에 대한 전향적 해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주요어: 가족주의, 정치사회화, 가족신분제, 도덕적·방어적·정치적·저항적 가족주의

1. 문제제기

식민지와 전쟁의 체험, 이념갈등과 분단, 독재와 압축적 산업화로 특징지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정치과정은 근대 국가 권력의 형성과정인 동시에 정치·경제적 권리의 주체로서 호명된 근대적 개인, 즉 '국민'의 형성 과정이기도 했다. 뒤르켐(Durkheim)의 '유기적 연대'의 개념은 국민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시민종교의 탄생이 상호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정체성,

* 이 논문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과 소중한 구술을 해주신 구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성공회대학교 석사, kcckmh@naver.com).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뒤르켐은 유기적 연대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개인을 그의 가족과 조국, 그리고 과거가 남겨준 전통과 집단행동에 연결시켜주는 유대는 점점 더 약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Durkheim 1988; 1999, 441). 그런데 한국 근대의 전개과정에서 국민정체성이 확립되고 시민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가족주의가 착종, 변형된 형태로 유지, 혹은 강화되어 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에 대한 집착과 ‘국가’에 대한 복종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현상(김동춘 1998; 2002), 가족주의와 국가주의, 탈정치화와 과잉 정치화라는 상반된 행위지향이 공존하는 현상은 어떠한 발생적 과정을 경과한 것일까? 이 연구는 언뜻 보면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이 모순이 아닌 이유를 국민형성과정의 역사적 경로와 내적 관계에서 찾아야 하며, 정치사회화의 구성적 산물로 가족주의의 발생적 과정에 천착할 때 복잡한 현상의 동인이 보다 잘 분석될 수 있다는 관점에 선다.

기존의 사회변동론 및 사회운동론의 논의들은 ‘탈정치화·보수화’의 기제로 작동하는 가족주의의 공리주의적 성격과 그것이 정치 발전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함의에 대해서 일정정도 공유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한국 현대사회의 가족주의는 주로 유교 전통 또는 압축적 산업화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거나, 현재의 관점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의 측면에 관심이 머물러 전통/근대, 확대가족/핵가족, 이기적/도덕적, 공/사라고 하는 일련의 이분법 속에서 현상적인 차원의 규범적 논쟁을 반복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그러나 한국에서의 가족은 사(私)적 영역이나 보살핌의 영역으로만 한정하기에는 그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공(公)적 사안과 중첩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전근대와

1)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families)을 개인성의 공간에서 정치적 공간으로, 가족주의를 봉건적 잔존물이나 근대 속의 전근대라는 차원을 넘어 근대의 주체형성의 문제로 환기시킨 페미니즘 진영의 기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Baret&McIntosh 1994; 권명아 2000). 유교 기원론에 대한 체계적 논박은 최우영(2006), 김동춘(2002)을 참고하라.

식민지적 궤적을 통해 구성된 공간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양현아 2007, 236).²⁾

역사구조론적·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가족주의를 의제화한 연구들은 6, 70년대에 결여된 정당성을 메우기 위한 발전주의 국가의 독특한 동원전략에 의해(김동노 1997; 강진웅 2001; Yong Chool Ha 2007), 혹은 식민지와 전쟁을 경유하여 이미 50년대에 한국의 현대 가족주의가 변형 또는 정착되었음을 지적한다(김동춘 1998; 2002; 강인철 2006). 이상의 연구는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가족주의를 강화한 ‘국가’의 역할과 그 사회정치적 결과들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특히 김동춘(2002)은 “식민지 이래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폭력적 지배체제, 계약적 실체로서의 사회나 국가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갖지 못한 식민지 근대화의 과정”이 “가족에 대한 헌신을 국가에 대한 헌신보다 우위에 두는” 가족주의적 실천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가설은 한국의 가족성원들이 겪은 ‘정치적 체험’과 의식이 가족주의의 강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행위자의 관점에서 특정한 행위지향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과 동력을 읽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때문에 가족주의 ‘일반’이 발현되는 방식 이면에, 다양한 주체들의 체험 속에서 재생산되는 분단체제(백낙청 1994)의 가족주의가 내포한 역동성과 다의성, 그 정치사회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한국전쟁기 두 체제를 직접 체험한 좌익 관련 유가족들의 생애체험 및 정치사회화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푸코(Foucault 1994)의 말을 빌리자면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공과 사의 사회적 혼혈이며, 공(公)과 사(私)의 경계는 유동적으로 재구성된다. 그것의 역동적인 구성과정과 역사적 배치는, 행위자들이 사회정치적 수준과 맺는 관계들과 살았던 체험(lived experience) 속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간과되어왔던 행위 주체들의 정치성과 체험(lived-experience)을 복원함으로써 한국의 현대 가족주의가 식민지 근대의 가족정치(family politics) 과정의 구성물임을 드러내고, 그 함의를 밝히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서 양적으로도 결코 적은 수라고 할 수 없는 이른바 좌익 혐의 가족³⁾들은 분단국가(divided states)의 시민적 권리로부터 가장 배제되었던 존재들이다. 이들은 통계학적 대표성을 갖지는 않지만, 연좌제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간접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술한 ‘국가 내의 비(非)국민’, ‘이등국민’ 등의 구체적 일반성을 함축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⁴⁾ 즉 고도로 정치적인 가족사의 체험을 간직한 이들의 생애사례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분단국가의 정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주의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⁵⁾ 2004년 알게 된 김동호 씨의 사례가 첫 번째 눈덩이가 되어 시작된 본 연구는 2007년~2008년, 6명의 구술자 가족과 총 15회의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인 생애사재구성방법론(Rosenthal 2004; 이희영 2005)

3) 알다시피 한국사회에서 ‘좌익’은 처음부터 좌익이었던 것이 아니라 좌익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좌익 혐의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를 통틀어 소위 친공산주의적 활동을 했다는 부역자는 55만 915명에 달한다(박원순 1990, 185). 한국 민간인 희생자는 99만으로(이대근 1987), 월북 이등 인구는 정부 당국의 통계와 차이는 있지만 약 35만 명으로 추산된다(조은 2006, 74). 전쟁시 남북한 인명피해의 통계는 도합 500만 명을 넘어서며 당시 남북한 인구를 3천만 명으로 환산할 경우 적어도 6명 중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추정된다.

4) 구체적 일반성은 사례의 재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복잡한 행위의 전개과정이다. 다른 사례들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개별사례에 머무르지 않음을 지시하는 개념이다(이희영 2005, 143).

5) 콜리어(Collier)는 이러한 사례의 방법론적 의미를 ‘병리적인 것의 방법론적 우선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병리적 사례와 극단적 사례에 공통되는 점은,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연구에 의해 정상적인 것의 조건에 관해 알아낼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사회적 결속의 조건은 분열의 시기에 분명히 드러나고 국가 기구들의 정당성의 조건은 그것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리하게 연구될 수 있다. 즉 연구자가 실험을 위해 상황을 유발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연구자와 무관하게 발생한다”(Collier 1994, 165).

에 기초하여 유가족들의 가족생애사 및 정치사회화 과정을 분석했다.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중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현대사의 정치과정에서 가족 성원들은 국가/상태(state)를 ‘어떻게’ 체험했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과 가치체계를 강화·재생산해온 사회정치적 원인과 과정은 무엇인가? 둘째, 이들의 생애사례에서 발현되는 가족주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이것이 가족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갖는 이론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설정에 따라 2절에서는 한국의 가족주의를 재생산하는 구조적·제도적 조건으로 분단사회의 시민권과 가족의 문제를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위한 방법론과 주요 개념을 제시한다. 3절에서는 비교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사례 가족주의의 유형적 특징을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4절에서는 분석의 함의를 도출한다. 5절에서는 가족주의의 이완·재구성의 조건과 전망을 토론하고, 논의를 마무리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론

1) 식민지 근대의 가족: 분단사회의 시민권과 가족신분제⁶⁾

로칸(Rokkan 1975)은 국가형성의 제반과제를 초기국가형성과 국민형성, 정치적 시민권의 확립, 사회적 시민권의 확립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지적한다. 그러나 영토적 조직만이 아닌 멤버십 조직으로서의 국가가 시민권을 만드는 것은 시민과 비(非)시민 사이에 관념적·법적·이데올로기

6) 본 연구가 채택한 주요개념 및 이론적 자원은 경험 연구 이전에 연역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사례 재구성 결과에 기초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적 경계를 만드는 것이며, 시민권은 국가형성의 성격과 경로, 국민, 민족에 대한 자기이해 혹은 국민됨(nationhood)에 주로 달려 있다(Brubaker 1992). 이에 준할 때 시민권은 ‘이해관계의 정치적 산물이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적 산물’로 이해된다.⁷⁾

한국전쟁 혹은 초기 안보국가에서 한국의 ‘국민 만들기’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갖는 주체를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국민’, ‘비(非)국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은 분단국가 형성과 시민권의 문제를 다룬 김동춘(2006)에 의해 논급된 바 있다. 분단국가 수립과정에서 형성된 국가는 ‘민족’ 구성원 중 일부를 ‘적’ 혹은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면서 성립된 결손국가, 안보국가, 전쟁국가였으며 이러한 분단된 반쪽 국가라는 조건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분열만이 아니라 국민의 정체성도 분열되었다(김동춘 1997, 89-100).

그러나 한국의 가족과 국가, 시민권(장미경 2005; 최현 2006; 김동춘 2006)에 대한 논의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부분 중 하나는 연좌제와 가족법, 시민권의 관계 영역이다. 터너(Turner)는 사회적 정체성을 창출하는 재생산적 시민권(reproductive citizenship)의 경로로 전쟁, 노동, 재생산을 제시하고, 이 재생산 영역의 핵심에 가족이 있음을 지적한다.

즉 사회성원들은 국가가 의도하는 정상 가족(The Family)을 구성함으로써 시민권을 부여받는 동시에, 재생산한다(Turner 2001, 192-199). 연관선상에서 법사회학적 차원에서 그랜돈(Glendon 1989)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시사적이다. ‘가족법’은 법과 사회관습을 나타낼(represent) 뿐만 아니라 역으로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 구성하는(construct) 기능을 가진다고 하면서, 가족법은 (국가의) ‘이상적인 가족에

7) 이에 준해, 이 글에서는 국민정체성을 “한 나라의 국민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혹은 자기 국민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규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최현 2003). 물론 가족정체성도 “한 가족의 성원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혹은 자기 가족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규정”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대한 상징적 재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이에 착안할 때 한국의 가족구성원에겐 네 개의 법이 존재했다. 1948년 이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1조에 명시된 ‘헌법’은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을 표상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작동했던 헌법은 ‘48년 헌법의 쌍생아’였던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었으며, 그것은 항상적·제도적·물리적 폭력을 동반했다.

민법상에 있는 가족법은 부계중심적인 친족관계의 범위를 구성하고 국가가 의도하는 가족상(像)을 규정했다.⁹⁾ 식민국가는 근대적인 호적 제도를 정비하여 전 국민을 국가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조직화했고, 식민지 한국에서부터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강진웅 2001). 호주제는 2005년 법조문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 아버지의 시민권을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또한 취업 및 공직 진출의 제약은 물론, 광포한 국가폭력의 위협 및 사회감시체제의 신원(身元)조회, 일상적인 가족상황차별(family status discrimination)을 감내해야 했던 술한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이등시민들에게 연좌제는 출생이라는 귀속적 지위에 의해 국민됨 또는 시민됨의 지위가 위협받는 또 하나의 신분적 질서로 체험될 수밖에 없다. 범죄에 대해 친족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전근대적인 형법이었던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 시기 전면 철폐가 공식 선포된 이래 1980년 5공화국 헌법에서

8) Glendon,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aw-State, Law, and Family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16, 87; 양현아, “1987년 이후 가족법의 변화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32권 단일호, 2007, p.104에서 재인용.

9) 1909년 일제의 호적법을 적용한 민적법은 갑오경장으로 인해 해체된 신분제를 호주상속 및 부계친족제도로 재편함으로써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족법 개정사 및 특히 ‘신분법’으로서의 가족법에 대한 분석은 이효재(2005), 양현아(1995, 118-119) 참조. “상법이나 형법과는 달리 가족법은 물질적 강제보다는 한 사회의 도덕의 규제에 관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신분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된다.”

‘연좌제 금지조항’을 명문화한 이후에도 1세기를 넘게 근대 형법의 사법 책임 개별화원칙을 위배하면서,¹⁰⁾ 국민과 비(非)국민을 이념과 가족으로 분할했다.

가족구성원의 생활세계를 가로지르는 이 네 개 법의 양상블은 한국의 가족과 국가를 묶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었다. 그리고 이는 ‘빨갱이’, ‘신원특수자’ 등 다양한 상징폭력과 의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만성적인 자기검열의 내면화를 요구했다. 반공규율사회(조희연 2003)에서 ‘나쁜 본보기’를 통한 처벌은 한 사람의 사례로 백 배의 효과를 내는 가장 효율적인 통치의 방법이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민간인 학살이 100만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양가 10촌의 범위에 걸쳐 적용되었던 연좌제의 관행과 부계중심적 가족법의 친족범위규정이 한국인의 생활세계와 정치문화에 미친 의식/무의식적인 과급력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¹¹⁾ 식민지 근대의 전개과정에서 ‘가족’으로의 분할과 ‘국민’의 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시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왜곡된 근대성과 불완전한 사회계약의 단면을 반영한다.

요약하자면 형식적 참정권 및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국민과 비(非)국민, 일등시민과 이등시민의 경계가 가족으로 구획되며, 정치경제적·사회적 폐쇄회로로 작동했던 연좌제(조은 2008, 27)는 국가형성의 남은 세 과제(국민형성, 정치적 시민권과 사회적 시민권의 확립)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핵심적인 장치였다. 전근대의 가(家) 관념, 식민지 규율의 궤도

10) 제5공화국 헌법(1980년 제정)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항(제12조 3항)으로 명문화했고, 다시 제6공화국 헌법 제 13조 3항에서 위 조항의 자구만 약간 수정하여 연좌제 금지를 재확인했다(김영범 1989, 346-347).

11) 최근 ‘평범한’ 노인 부부의 전쟁체험을 다룬 김왕배(2009)의 연구는 일가친척 중 한 사람의 좌익력이 ‘자신과 자식의 출세 방향’을 저해할 것이라는 연좌제로부터의 피해의식과 가족 방어전략을 낳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반공 규율에 동의를 보내는 ‘반공 기억의 고착화’로 이어지는 유형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와 전력을 가진 가부장적 가족법과 새로운 형태의 이념적 위계질서가 가미된 연좌제의 결합은 비(非)가시적인 형태로 가족과 국가관계를 규율하는 가족신분제의 신분적 정치로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신분제(family status system)를 가족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가족’으로 제한, 구속하는 제도적·이데올로기적 기제이자 가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위전략을 산출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고려한다.

2) 연구방법론 및 주요 개념: 가족주의와 정치사회화

이 글에서는 ‘가족주의’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유대의 형태이자 개인-가족-국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사회화의 산물로 이해하고 재정의한다.¹²⁾ 사례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분석하는 가족주의는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중심적 가치체계 및 정체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포함한 복합적인 원인과 경과를 고려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숨겨진 관계항을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앞에서 언급했지만, 본 논문의 사례 분석의 방법은 상징적 상호

12) 정치사회화는 개인이 자기가 속한 정치체에 대해 갖는 태도 및 감정을 형성시켜가는 과정이자 그 정치체 내에서의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스스로의 태도 및 감정을 정립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택희 1980, 446). 이 글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및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정치사회화를 ‘생애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매개된, 정치적인 혹은 정치적 잠재성을 가진 사회적 타자와 주체의 의식, 무의식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한 이희영(2006, 206)에 따른다.

13) 즉 가족중심적 가치체계로서의 가족주의는 개인과 가족, 가족과 국가라는 이중적인 가치항의 길항관계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맥락과 뒤얽힌 세력들의 총체(Pierson 2003, 271)이자 권력의 제도화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정당성이나 가치의식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갖는 국가성(stateness)을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Nettle 1994). 본 논문에서는 가족을 감정적 연대를 구성요소를 하는 공동존재의 한 형식인 동시에 특수한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구성적 실체(families)로 보고, 가족성원들을 사회 구조의 변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집(家)’의 재생산 전략의 행위주체로 규정한다. 이는 혈연에 제한되거나 단일한 행위주체를 전제하는 가족전략(family strategy)의 좁은 함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집(家)’은 가족 구성원, 가족이 생활하는 거주지, 건물,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 그 외에 친족, 동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

작용론 및 해석학의 전통에 있는 생애사재구성방법론의 전제와 원리들에 기초해 있다. 생의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변화들은 개인화의 표현인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보여준다. 생애사재구성방법론은 특정한 개인의 삶의 이력 속에 드러나는 해당 사회의 구조와 발생과정을 읽어 내고자 한다(이희영 2005).¹⁴⁾

구체적으로 사례연구에서는 복수(複數)의 국가세력이 경합하고 가족구성원과 갈등했던 한국 정치변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의 재구성을 통한 정체성의 구성과정과 행위 지향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가족구성원의 시민적 권리가 분단체제가 부과한 이념적·신분적 질서에 의해 제한되고 위계화되어 온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드(Mead)와 호네스(Honeth)의 ‘인정투쟁’ 논의는 가족구성원들의 정치적·사회적 정체성에 상응하는 ‘국민되기’와 ‘가족되기’의 행위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생산적 단초를 제공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을 이미 권리의 담지자로 인정하도록 가르쳐 왔던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적인 관점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 역시 권리의 인격체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기긍정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충동성과 창조성을 가진 ‘주격 나(I)’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목적격 나(Me)’와는 다른 어떤 부분을 인정받으려는 투쟁은 사회화 과정과 맞물려 있는 개인화 과정의 추진력인 동시에,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에서 변화하는 정체성의 형성과정이다. 이러한 미드의 정체성이론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공간의 확장이라는 근대 사회관계의 변화된 조건에 기반해 있다(Mead 1962, 248 ;

미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형숙(2000)을 참조할 것.

14) 방법론의 원리와 절차에 대해서는 이희영(2005) 참조. 개략하면 생애사재구성방법론은 1)서사적 인터뷰 2)가설추론적 분석 3)이야기된 생애사, 살았던 생애사, 체험된 생애사라는 서로 다른 분석의 층위에 따라 이야기의 특징을 변별하고 상호 연관을 해명하는 과정을 거쳐 사례를 재구성한다. 이는 과거 ‘체험’의 사실성과 ‘기억’의 간극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해석학적 지침들을 제공함으로써, 냉전시대 금기시되었던 소재와 대상을 다루는 본 논문에 적실성을 갖는다.

Honeth 1996, 152-153).

그러나 인정투쟁(Honeth 1996) 논의의 핵심은 폭행, 권리 및 가치의 부정, 무시와 배제의 경험이 '도덕적 훼손'을 초래할 때, 이것은 자기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역설적으로 권리 인정 관계의 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되는 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 한국의 경우 근대로 가는 문턱에서 친족공동체의 도덕률을 단기간에 파괴했던 내전과 폭력, 학살이라는 사회전반의 불인정의 경험이 이후 어떠한 갈등과 인정투쟁의 형식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가치부여라는 인정형태가 신분적으로 조직화되는 한—다시 말하면, 신분 구성원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전제하는 사회에서는—사회적 평가가 집중되는 것이 개인화된 주체의 속성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전형화된 신분 집단의 속성이기에, 각 개인의 인정투쟁은 각 개인의 신분에 맞게 집단적으로 부여된 사회적 신망을 얻는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수행된다는 대목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인정경험을 통해 각 개인이 도달하게 되는 실천적 자기관계는 집단적 자부심이나 집단적 명예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된 인정 질서 역시 자신들의 집단적 속성에 대한 불공정한 가치 평가를 시정하기 위해 “보상적 존중을 위한 ‘대항 문화’”라는 특수한 경로를 산출한다(Honeth 1996, 203-218).

요컨대 특정한 형태의 신분적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에서의 인정의 관계형식은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를 변형하는 행위동학을 산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지점은 식민지 근대의 전개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일차사회화의 장(場)에서 형성된 친족공동체 및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이 불일치할 때, 또는—하나의 가족사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는—‘두 개의 국가’가 완전한 체계모니를 갖지 못한 정치과정에서 ‘일반화된 타자’의 규범과 담론이 불일치할 때, 인정투쟁의 양식은 서로 다른 경로와 복잡한 행위전략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적인 동시에 이념적으로 전형화된 신분 질서 속에서는 그 역동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되기’와 ‘국민되기’를 동반하는 가족주의의 발생적 과정—형성, 변화, 재생산—을 가족신분제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행위하는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형태의 ‘집(家)’의 재생산전략과 인정투쟁의 실천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3. 사례의 유형적 특성: 도덕적 · 방어적 · 정치적 · 저항적 가족주의

본 논문에서 소개될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공유한다. 구술자들은 모두 1930년대 생으로 각각의 사례는 식민지상황에서 식민국가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거나 혹은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저항적 가족사의 배경을 갖고 있다. 모든 사례는 1949년~50년 준국가기구에 의한 부친의 피학살 및 연동된 가족사의 굴절과 함께, 54~56년 서울 및 도시 지역으로 정치적 이동을 한 사례들이다. 서로 다른 체험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각 사례는 정치적 박해와 배제의 체험이 경제적 · 사회적 배제를 동반하면서, 가족을 단위로 한 생존 전략과 집의 재생산, 그리고 국민되기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¹⁵⁾ 다음은 구술자들의 약력이다.

구술자들은 모두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식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정치적 타자’ 혹은 ‘대안 국가’로서 민족주의 · 사회주의 세력을 상징하면서 국민정체성의 맹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구체적인 정체(polities)로 체험되기보다 마을의 계급변동 및 정치 갈등과 중첩되면서 부친 및 모친, 형님 등 가족 내 인물들이 중요한 타자로 자리매김되는 특징을

15) 가족주의와 ‘국민되기’로 수렴되는 동일한 행위지향의 형성과정에는 신원조회, 주민증, 호적등본, “3호제 5호제 식의” 민간사찰 등 ‘감시’에 대한 일상적인 강박의식을 동반한 ‘연좌제 효과’가 90년대 중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1〉 구술자들의 약력

사례	성별	출생년도	출생지	전쟁피해(학살) 및 체험	학력	전 직업	현재상태
김동호	남	1938	함북	부·형·외조모 등 입산	대퇴	사업 (제조/무역)	사업(서울)
박효광	남	1937	충남	부친(좌)·고모부(우)	초졸	생산직(벽지)	무직(서울)
박선주	여	1930	전남	부·오빠·남편/입산 투옥	초졸	생산직(섬유)	시설거주(서울)
이충우	남	1933	전남	부(좌)매형(우)입산	대졸	공무원/교직	사회단체(서울)
강순자	여	1936	전남	남편장애·투옥·병사	초퇴	생산직(섬유)	생산직(서울)
유효순	여	1930	전남	부친(우)·남동생(좌)	초졸	주부	농업(전남)

주: 굵게 표시된 사례가 본문에서 소개될 사례에 해당한다. 구술자들의 인적 사항의 보호를 위해 인명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보인다. 각 사례 가족주의의 유형은 각각의 국민정체성에 상응하는 가족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의 가치항이 절대화된 가운데 ‘국가’의 가치항이 상대화된 형태로 1990년대 중반까지, 혹은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정치 환경의 변화와 조응하는 고유한 사회화의 경로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모든 사례는 동일한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지만, 이하에서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구술자들의 전기(轉機)를 중심으로 비교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사례 가족주의의 유형적 특징을 압축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대표사례에 해당하는 김동호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주의의 형성 과정이 갖는 구조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최소비교의 사례에 해당하는 박효광 씨와 최대비교의 사례에 해당하는 이충우 씨의 사례에서 가족주의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살펴본다.¹⁶⁾

16) 개별 사례는 자체로 독립적인 내용을 갖지만, 사례의 구조적 특징은 해석과 재해석을 통한 유형화 작업의 결과이다. 사례의 구조적 특징의 상호 공통점을 최소비교의 사례라고 표현하고,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 최대비교의 사례라고 표현한다(이희영 2006, 235). 본 글에서 비교의 준거는 중요한 타자의 재구성 과정에서 변화하는 가족주의의 유형적 특징이다.

1) 분열된 국민 정체성과 가족의 국가화: “나의 경제적 성공은 가족, 형제, 전체 동포, 민족을 위해 살아온 애국적 실천의 결과”

가장 강한 자기방어기전과 역동적인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사례인 김동호 씨의 경우, 이야기의 서사구조는 1964년을 기점으로 정치사와 경제사로 양분되어 있는데 72년 유신직후 가족사적 체험을 이야기 하던 도중, 동일한 생애사적 사실에 대한 재서술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두 가지 해석과 정체성이 공존함을 시사한다.

김동호 씨의 경우 식민지 말 마을 내에서의 정치 갈등¹⁷⁾과 해방-학살-피난과 입산에 이르는 국가건설시기 강한 정치적 체험은 맹아적인 형태로나마 국민(nation)으로서의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전쟁은 가족사의 굴절을 의미했고, 부친 및 큰형님의 정치력으로부터 부과된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은 가족성원들의 경제·정치적 행위지평을 제약했다. 이 과정은 구술자에게 ‘집(家)의 복원’과 ‘국민되기’라는 두 가지 생애사적 과제를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민됨을 입증해야 했고, 실제로 국민됨을 열망했던 김동호 씨의 사례에서 국민되기 노력은 중의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구술자는 비(非)국민으로서의 가족 자아(familial self)와 국민됨을 열망하는 정치적 자아(political self)를 정치참여를 통해 통합하고자 하는 생애사적 노력들을 보여준다.

구술자의 전체 이야기는 정확히 그 내용이 언술되지 않은 “꿈”(또는 “목적”)과 “가족” 사이의,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행위지향 사이의 갈등이 끌고 가고 있다. 만학도로 낮에는 시장에서 ‘만년필’과 ‘패스워드’를 팔고 밤에는 고등학교를 다녔던 50년대 후반, 구술자는 자신의 진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17) 구술자는 초기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해방과 전쟁을 관통하는 가족사의 “비극의 발단”을 “친일파 조씨”의 비도덕적 행각으로 귀착시키는데, 초기사회화 과정에서 여순 사건 후 입산해있던 “공산주의” 세력을 대안적인 도덕적·정치적 타자로 구성한다.

내가 그때 당시에 비록 어렸지만은 학교 다닐 때 지금 현재 꿈이 컸다고, 그리고 에 내가 정치에도 상당히 그 뭔가 뜻을 두었지만은 에 남 밑에 가서 심부름 같은 것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남을 내가 끌어들이랑정 내가 주인, 남 밑에 가서, 그 뭐가, *엑스트라* 역할을 하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그 목적으로 했던 것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어떻게든가 우리 집안을 가난에서 구출을 하고 지금 현재 나가야 이끌어 가야 이 경기에, 내가 대학을 택할 것도 사실은 정치과나 법대를 가고 싶었어 어? 내가 머리가 출중하진 않은데 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상대를 가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경제적인 능력을 길러야 내가 ‘목적’을 달성할텐데 해가지고 상대를 ○○대 상대를 택한 것 아니냐? 대학도? (……) 어려워도 내가 홀로 서가지고 내길을 가야 내가 ‘목적’을 달성하지 취업해가지고 월급 받고 있게 되면 먹고 살기가 바빠지는 것이 아니냐(I, 80:1481:3)¹⁸⁾

여기서 구술자는 정치에의 “뜻”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의 갈등을 ‘주인공’과 ‘엑스트라’, ‘정치과/법대’ 그리고 ‘상대’ 사이의 선택의 갈등으로 체험하고 있다. 나아가 상대에의 최종적인 선택도 경제적인 능력을 길러 가족을 가난에서 구출한 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절충적인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¹⁹⁾ 이 “목적”과 “꿈”의 내용은 4차 심층 면접에서 서야 언술된다. 그 꿈의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구술자는

18) ‘정치과/법대’와 ‘상대’ 사이의 갈등으로 표현되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가지 행위지향의 형성과정은 “의병/항일운동”과 “항만사업”으로 표현되는 선대의 가족사적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 텍스트에서 구술자는 ‘남 밑에 가서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의 산물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4차 심층 면접에서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가 연좌제 때문”이었음을 다시 언술한다.

19) 구술자는 실제로 징집을 피해,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을 ‘첩’의 아들로 다시 신고하여 ‘개명(改名)’을 하는 역동적인 행위전략을 보여준다.

한참을 침묵한 후, 혼잣말처럼 “중앙정치에 진출해서 평등한 분배를 실현하는 꿈”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치(政治)란 글자 그대로 골고루 평등하게, 바르게 잘 살아가자는 얘기”라고 말한다.²⁰⁾ 이러한 열망은 1960년 4·19의 국면에서 “○○대학교 학생수습대책위원회 대표”로 참여하는 동인이 된다. 그러나 구술자는 4·19의 실패 이후 5·16 시대가 본격화되는 행위 공간 민주당은 물론 유신세력에게 크게 실망과 단절의 감정(emotion)을,²¹⁾ 그리고 이어지는 “자책의식”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 키우는 꿈” 이야기에서 이어짐²²⁾) 그런 생각도 거의 했었고 그랬는데 내가 정치인들 속에서 그 뭔가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뭔가 엑스트라 역할밖에 더 되겠나 그러니까 이 정치, 이 무대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5·16 군사혁명’이 터져버렸잖아 그 다음에 (1) 5·16 군사혁명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3) 에이 소위 이제 나같이 학생 운동하던 사람은 묶이는거라 어디 가서 활동할 데가 없어 어? (1) 활동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맨날 가서 산다는게 도서관이야(1) 근데 도서관에서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때 5·16 군사혁명 이 육군대장, 육군소장 박정희, 그 박정희씨가 군사혁명을 일으킨 것 아니냐 (……) 등록금을 못 내니까 도서관에서는 책을 안 빌려준거야 (……) 그렇게 설움도 받고 그랬어 그때 느낀 점이 (……) 남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서울 시내 환하게 전등이 보이잖아 (1) 그런데 탁~한 가지 그, 머리에 스쳐지나갔지 저 저 많은 불빛을 내 스스로 한 등

20)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돼”라고 덧붙인다.

21) 민주당과 보수세력은 이승만의 하야로 마치 4·19 시위의 요구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선전하면서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회생을 노리는 자유당세력과 독 점자본은 민주당과 결탁하여 내각제 개헌을 서둘러 추진하고 내각제=민주화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다(김동춘 1997, 244).

22) 당시 “양 키우는 꿈”의 내용은 대학에 가서 “교양과 판단력”을 갖추고 “고향”에 내려가 산모들에게 젖을 나눠주면서 “인심을 흡수하고” “청장년들과 호호하면서” “정치”를 하는 꿈이었다. 위의 이야기는 이 ‘꿈’을 둘러싸고 “기지도 뛰지도 못한 놈이 날 생각부터 한다고” 큰 형님에게 크게 혼이 났던 일화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다.

도 키지 못했다 생각이 드는거야 (……) 내가 내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뭐냐 어? 소위 생산이 없는 이상과 꿈을 가지고 어 내가 목적달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자책의식이 들어가지고 일 해야, 이제부터 일을 해야겠다 그러다 이제 64년이 온거다 64년도 (I, 45:22-47:6, 2007)²³⁾

1960년에서 64년의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위 텍스트는 5·16 이후 ‘정치의 죽음’에 비견할 만한 갑자기 변해버린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디 가서 활동할 데”가 없다는 구술자의 고립감을, 돈이 없어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을 때 느꼈던 ‘절음’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후 남산 꼭대기에서 “정치 이, 무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엑스트라”로 밀려난 자기(self)를 성찰했던 시간은 다시 ‘주인공’으로 자신의 ‘활동 무대’를 재조직하는 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탁~한가지, 그 머리에 스”치는 “자책의식”과 함께, 구술자는 대학 4학기 등록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큰형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접고 1964년 가평으로 채소밭을 경작하러 내려가면서 “가족을 가난에서 구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 활동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나 위의 텍스트에서, 여전히 구술자가 ‘내 능력’을 키운 후 ‘목적 달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의 생애사적 사실에 의하면, 구술자는 1972년 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 담론에 조응하는 “어린이 티끌동산 타이틀(“국가적 사업”으로 언술되는)”을 통해 ‘국민 뒸’를 연출하는 한편, 잠복해 있는 정치에의 열망과 현실의 경제적 요구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지만, 그 조차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한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 구술자는 국가폭력에 의한 이차적인 가족사의 훼손을 체험하면서 가족중심적 행위성이 중층적으로 구조화되는 전기(轉機)를 완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²⁴⁾ 여기서 구술자는 “거기서 이야기를 조금 바꿔

23) 텍스트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은 구술자의 음성이 커지는 대목을 표현한다. 텍스트의 기호와 숫자는 구술을 기록하는 본 논문의 방식으로(인터뷰 횟수, 텍스트 페이지: 행, 연도)를 나타낸다.

볼까?”라며 전후 피난해 있던 장흥 외가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1945년 초등학교 입학의 시점부터 시작된 첫 번째 이야기는 해방 공간에서의 마을 내 친일파와의 갈등, 49년 부친의 피학살과 51년 입산, 4·19, 5·16, 유신 등을 경과하여 자신의 정치적 “꿈”이 좌절되는 과정이 가족사적 박해의 체험과 엇갈리면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53년의 시점에서 다시 시작된 이야기는 ‘정치적 체험’의 흔적이 완벽하게 누락된 채 “현실에 충실하게” 가족과 경제 활동에 매진해온 성공서사로 앞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압축적으로 재서술하는 반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후 학교와 시장에서 형성된 사회화의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애국’이라는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 뭐가 자기 욕심을 떠나가지고 우리 형제, 전체 동포, 민족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되는데”라는 재해석에서 구술자가 여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아상(像)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가족 중심적 삶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I: 86-87, 2007). 이 지점에서 발생한 구술자의 이야기의 반전(反轉)은 과거 정치적 피해자였던 가족 정체성과 현재 경제적 성공을 통해 획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정체성이 유기적인 관계 맺기에 실패했음을 인지했을 때, 이야기의 부조리와 분열을 해소하고 재통합하기 위한 생애사적 노력(biographical work, Volter 2000)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두 개의 사회화의 경로에서 형성된 자신의 삶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훼손된 가족의 트라우마와 분열된 국민정체성을 반영한다.

24) 71년 구술자의 중요한 타자였던 큰형님이 전시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한다. 1972년 유신헌법과 함께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당시 안주업을 하던 넷째 동생이 “취포”를 “취고기”로 오인한 특무대에게 구속된다. 구술자는 “권총을 돌려메 가지고 급습한 후, 망치로 갖다 금고를 두들겨 부시던 특무대”의 횡포를 “무법자”와 같은 인상으로 체험하고 있다(II, 73:21-75:19, 2007).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외제물품’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들의 과잉 수사로 오토바이를 타던 “둘째형”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이다. 명백히 “유도살인”이었지만 목격자가 나서지 않아 진정활동에 실패했고, 이 억울한 죽음은 현재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다섯째 동생에게 아직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다.

‘절대화된 가족과 분열된 국민 정체성’으로 요약되는 김동호 씨의 사례는 짧은 시간 꿈꾸었던 대안적 국가와 현실의 폭력적 국가가 분열되면서, 현실 ‘국가’를 통해 실현되지 못한 정치적 지향을 일가(一家)에 대한 도덕적·경제적 부조와 보호를 통해 보상하고자 하는 ‘도덕적·방어적 가족주의’의 유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이 사례는 갈등적으로 공존 하던 정치, 경제, 가족이라는 행위지향을 가족이라는 가치로 ‘절충’ 시켜버린, ‘가족을 대신 국가로 삼는’ 정체성의 구성 과정을 보여준다. 이후의 생애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후의 삶은 형제들 및 친족 집단을 중심으로 집(家)의 경제적 재생산과 부조에 충실한 삶으로 일관되어 있다. 할머니를 모시면서 자신의 “집”을 사기 전에 밑으로 세 아우의 “집”을 먼저 샀고, 두 형수, 큰 조카, 사촌형제의 “집”을 사주고 문중(門中)을 이끄는 가장이자 보호막으로서의 삶을 자임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닦고 난 후” 전남 X군의 “향우회” 활동을 시작하는 한편, 92년 “극우단체”인 “대한발전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되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는 강한 일가주의 및 지역주의는 단지 직계가족에 한정되지 않고—동족부락이었던—일가(一家) 전체가 동질적인 가족사적 체험과 정치적 박해를 공유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범위로 구획된 가족상(像)을 반영한다. 김동호 씨에게 ‘가족’과 ‘고향’은 갈 곳을 잃어버린 정치적 충동이 전이(轉移)된 일종의 의사정치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⁶⁾

25) 구술자는 2차 면접이 끝난 후, 휴식을 취하는 사이 (TV를 보며) 혼잣말처럼 “근데 내가 한 가지 후회를 해, 그때(입산 때) 가족보다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건 지금 참 후회가 왜”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다시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가족중심적 삶을 재해석하는 구술자의 이야기의 반전은 이러한 ‘자책’과 ‘자기비판’의 의미를 함축한다.

26) 구술자는 현재 전남 X군 향우회 고문을 맡고 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온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지 않고 그늘진 곳에서 어 지내는 사람이 없도록 이 끌어줘가면서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친목회 형식”으로만 운영되던 당시 “폐쇄적인 향우회”의 “경제적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선배들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문호를 개방”했다(IV, 38:15-39:22).

2) 한 많은 가족들 싸움과 국가없음: “한 많은 가족들 싸움을 기술과 실력으로 개척해온 나와 형제들”

박효광 씨의 가족은 ‘부역자’ 가족이자 “납북된 외삼촌”을 둔 월북자 가족, 또 친족범위 내에서 인민군에 의한 학살을 경험한 복잡한 가족의 특성을 갖고 있다.²⁷⁾ ‘여운형계’였던 부친과 ‘계몽된 인물’이었던 모친은 해방과 함께 “성인야학”을 열었다. 구술자는 부친과 모친을 “저녁마다 쫓아다니며 항상 경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초기 사회화의 규범들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 군인민위원장을 맡았던 부친은 일주일 만에 “이건 내가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며” 집에 “은둔”을 하며 “정치망”을 쳤지만, 당시 X집안 사람의 밀고에 의해 대전 교도소에서 51년 총살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소작하고 있던 500평의 토지가 회수당했고, 간척사업을 하던 백석꾼 시절의 ‘윤택했던 집안 살림’을 모두 빼앗기는 상황에서 구술자 가족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무시, 차별을 체험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결심으로 시작한 ‘염전 노가다’의 기억으로부터 언뜻 잘 연결되지 않는 초기 이야기의 전반부는 절대적인 필요를 상징하는 ‘소급’이라는 주제-장(thematic field) 속에서 전개된다.

이 단락은 구술자가 ‘어머니’가 겪었던 “설움”과 “한”을 공명하면서 부친을 대신해 “흠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는 소년가장으로 자기(self) 역할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년여의 시간 동안 ‘염전노가다’, ‘금광’ 일 등 “안 해 본 일 없이 고생”을 했다. 그리고 1954년 “우리는 고생해갖고 먹고 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라”는 어머니의 결단과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 과정이 구술자의 첫 번째 전기(轉機)로 자리한다. 이후 서울에서의 생활은 모친의 가계력을 중심

2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9)의 자료에 의하면 충남 서부지역에 해당하는 구술자의 고향은 보도연맹 학살 및 재지 좌우익의 보복학살이 격렬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으로 펼쳐진다.

전쟁은 구술자에게 “한 많은 가족들 싸움”으로 체험되는 한편,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음음. 엄청나게 죽었다고-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고 뭐 동생들이고 그러니까 6·25 되니까 이 놈 이 새끼들말이야 그냥 가서 또 그냥 죽이는 거지 대창으로 죽이고 다 그렇게 그렇게 죽는 거야, 그게-그게 사상적인게 아니라 지들까지 웬수여서(웃음) 그런 악순환을 겪은 거야 이게 엄청난 거지 (큰 목소리로 빠르게) (……) 의 6·25라는게 이게 무슨 뭐 우익이고 좌익 싸움이 아니야 이게 이게 다 결국은 보면 뭐 그냥 **한 많은** 자기를 가족싸움이야 이게 (1)그래서 많이 죽은거야 이게(I, 9:12-32)

그게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된거야 사실은 그런 것들이, 왜냐면 그게 이제 그리고 가니까 죽인놈들이 경찰이 다 그쪽 사람들 아니여? (……) 오히려 내가 봐도 내가 편파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쪽 사람들의 더 잘못된거지 이게 먼저 시작해갔고 먼저 그런 것들을 해왔으니까(I, 55:7-15, 2007)

두 번째 텍스트에서 ‘그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이라는 모순적인 언술을 통해 구술자가 중립적인 표현으로 내전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방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술자는 “전연 신빙성을 갖지 못”하는 “공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 가슴 속에 **한이** 맺히는 거야 이제 이제 그 으-그-뭐라고 그럴까 그 공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원수같이 보이는 거야 응? 나도 봐도 그러 (1) 싸가지가 없어 보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니까 범이나 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정당성이 전연 신빙성을 갖지 못하는 인간들로서 생각해지지 존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생각이 안 들었어 그 뒤로는 (……) 그게 이제 한참 오래 가더
라고 (I, 59:3-21, 2007)

이러한 상황정의는 1960년대 초반 “뺨”과 “돈”이 있는 입대자들이 좋은 자리로 차출되어 가는 “요사스러운” 부패와 차별을 체험했던 ‘군대’의 체험에서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²⁸⁾ 박효광 씨의 사례는 준 국가 기구에 의한 가족사의 훼손이 현실 정치 및 국가에 대한 강한 불신과 거리두기로 이어지는 방어적 가족주의의 유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김동호 씨와 최소 비교의 거리를 구성한다.

그러나 박효광 씨와 김동호 씨는 ‘연좌제’를 매개로 70년대 초반의 행위공간을 다르게 체험한다. 당시 벽지공장을 다니고 있었던 박효광씨의 경우, 71년 지연과 연줄을 동원해 연좌제의 ‘장벽’을 극복하고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갔던 체험이²⁹⁾ 보수적 지역주의를 자신의 정치색으로 표방하게 되는 정치적 전기(轉機)가 되면서 “절대화된 가족과 도구적(연고주의) 국가” 정체성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벽지생산의 “신기술”을 연마했던 일본에서의 6개월의 기술연수를 구술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나라”로 체험하고 있다(I, 29:26-30:2). 즉 해외 연수는 이전의 불안했던 시민권의 확보를, 그리고 “개혁”과 “개화”의 가족사적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벽지기술 전문가로서의 자기(self)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의미하면서

28) 구술자는 군대에서의 부패와 차별을 체험하면서 “주전자 소주 한 말은 먹고, 하루 작살을 내 버리지”며 소대에 들어가 “하시고 뭐고 다 때려 드러눕힐” 사건을 일으켰다. “돈이라면 우리도 없는 건 아니거든” (I, 68: 20, 2008)이라는 구술자의 말에서 당시의 저항이 단순히 좋은 자리를 배당받지 못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전후 가족들이 겪었던 차별이 군대에서의 차별과 오버랩되면서 표출된 분노임을 짐작할 수 있다.

29) 1969년 김종필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구술자의 고향에 공화당, 지구당이 창립되었고, 71년 박정희가 ‘연좌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때 구술자는 먼 친척별이었던 고향의 공화당 위원장의 인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연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구술자가 이때부터 지역중심의 정치색을 표방하게 된 것인지는 이후의 체험 속에서 보다 엄밀히 고찰될 필요가 있지만, 이 사건이 작지 않은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강한 불신과 단절감으로 일관해왔던 ‘공권력’ 및 ‘고향’ 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구술자는 1980년대 중반 “연줄과 텃세가 관행이” 되어있는 족벌주의적 기업 질서 속에서 지위 상승의 한계를 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는 실력과 기술은 있었지만 학력과 자본은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드러나는 구술자의 생애사적 관점은 “한 많은 가족들 싸움을 기술과 실력으로 이겨온 나와 형제들, 하지만 연줄과 자본은 부족했던 나의 인생”으로 요약된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전형성은 ‘계속되는 피난사회’에서의 ‘은둔’의 생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호 씨와의 유사성은 ‘군대’ 체험을 화두로 정치적 시민권의 공고함을 건드렸을 때 드러나는 자기방어 기전에서도 발견된다. 즉 이때 구술자는 자신이 연좌제의 피해자였음을 부인(denegation)하는 한편, “김일성이가 쳐들어와서”라는 전형적인 반공 담론을 동원하여 전쟁의 “발단”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반복한다. 이들이 표방하는 반공주의와 연술의 균열은 가족사에 얽힌 이단시된 정치력을 방어하는 동시에, 체제의 일원임을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 ‘탈색’과 ‘변조’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례 재구성을 통해 볼 때 박효광 씨에게 ‘지역주의’ 및 ‘정치적 보수주의’라는 가치의 선택은 도구적 국가의식과 양면을 이루는 한편, ‘대안적인 정치적 타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실질적인 행위의 준거로 자리하고 있는 가족주의적 행위지향에 덧씌워진 “정치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3) 미완의 가족과 미완의 국가: “나의 통일운동은 ‘집(家)의 복원과 민족의 복원을 위한 생애사적 노력”

전남 집성촌의 재지 양반 출신인 이충우 씨의 생애사의 전반부는 “모범공무원되기”의 생애 전략과 각종 연줄을 동원한 ‘연좌제 극복의 서사 구조’로 특징지어진다. 구술자는 ‘감시’에 대한 강한 강박의식 속에서 1960,

70년대 지나간 침묵의 세월을 살아내며 ‘공직’에서의 지위상승을 통한 ‘명예’ 회복이라는 집(家)의 재생산전략에 매진한다.³⁰⁾ 당시 “도민증”에는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딱 표시 나것게 요려고 비틀어져” 있었고, 구술자는 매년 인맥을 동원해서 ‘도민증’을 “재차재차” 수정해야 했다(III, 10:1-7, 2008). 구술자는 이 시기 아들이 공무원으로 출세하기를 바라며 “박정희를 지지”하는, “가슴앓이를 앓”았던 어머니와 학살당한 아버지, (중학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친구 H 등이 연결하고 있는 자신의 정치적 자아(political self) 사이에서 오랜 시간 정체성의 갈등과 복합감정을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³¹⁾ 이때까지 현실 ‘국가’의 피해자인 동시에 공모자로 살아가야 했던 구술자에게 두 개의 가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은 화해되지 못하고 갈등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술자는 교직에서의 정년퇴임을 5년 앞둔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구술자는 성급 ‘광주’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떻게 가시게 되신거예요?)

민주화를 위해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어 쓰겼으니까 그런거지 (1) 그러가지고 79년도에 와갖고 80년 사건 나 있을 때 내가 청평가 있었 거든? 요, 요, 거기서는 뉴스를 듣는디 광주에 그 하는 막 나오잖아 열 마나 올었는지 몰라 혼자 (1) 교실에서 (1) 방송 듣고 (3) 그러가지고 000 한 다음에(II, 51:23-27) (사회참여 부분 하략)

30) 이 시기 구술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투자, ‘집’ 장사 등 사(私)적인 경로를 통한 집의 재생산에 매진하며 부패한 행정 관행과 조응해간다는 점에서 앞의 박효광 씨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다.

31) 구술자에게 ‘어머니’와 ‘친구 H’는 경쟁하는(competitive) 타자들로 위치한다.

다음은 보충질문에서 드러나는 ‘87년’ 과 ‘김대중’ 에 대한 기억이다.

마음이 그때는 인자 김대중이(웃음) 어서 모인다-그러면 그냥 쫓아 다닌거야 사람데꼬 우리 들어가서 술한잔 하세-거기가서 하고 쓰리 꾸준한데 그냥 돈을 쓰리를 당해도 하~나도 원망스럽지도 않고(웃음) 그저 그냥 좋은거야 김대중이가 대통령만 된다면 (1) 그리고 또 인자 민주세력이 주체세력만 된다면 그렇게 좋~았던거야 그리고 해서 다 해주고 여기서도 다 찍어주고 다 임채정이 호남향우회도 다 해갖고 (III, 41: 1-5)

근무하던 학교에서 ‘방송’ 을 들으며 “혼자서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라는 앞의 이야기에서 ‘왕주’ 의 충격으로 각인된 도덕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텍스트에서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 친구들이 주도 하던 ‘김대중’ 선거운동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연고조직들을 동원하던 당시상황을 “돈을 쓰리를 당해도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체험하는 구술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80년과 1987년의 체험은 오랜 시간 억압되어왔던 자신의 정치적 희망을 ‘김대중’ 에게 투사 (projection)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구술자는 “국민으로서의 투표의 의무와 권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구술자는 정치무대의 뒷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구술자는 늘 아버지의 경력에서 따라오는 ‘낙인’ 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애들에게도 일체 학생운동도 못하게 했”다(I, 17:1-18).

그렇다면 그의 사회참여의 계기와 동인은 무엇이였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하지만, 무엇보다 “김영삼 정부 시대” 에 1995년 해방 50주년 기념으로 독립유공자 추가 선정 지침이 확정되면서 이때 가깝게 지내던 대소가 중 한 집안이 “빨갱이 가족이라는 그걸 풀어버리고” “애국자”가

되어 “죽은 이의 명예를 세워줬”던 이 사건은 연좌제의 실질적 폐지, 그리고 정치적 시민권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함축하면서 구술자의 사회참여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서사구조를 갖고 있는 초기 이야기는 구술자의 가족사와 생애사적 관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야기는 토벌대 출신의 “상이용사격의 신분”이었던 구술자의 모친을 돌봐줬던 고향 지인의 인물됨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하여—일제 시대 친일쪽이었던 종파쪽 집안과 반일쪽이었던 우리 집안 간의 문중 내 갈등—김영삼 정부 때 ‘빨갱이 가족’라는 낙인을 풀어버리고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로서 ‘명예’를 회복한 ○○씨 집안—CIC와 CID 활동을 하며 일제 때부터 ‘끄나풀’ 노릇을 했지만 ‘원호대상자’로 지정된 종파쪽 ○○ 집안—‘꼴딱 망해버린 우리집’과 전시 “재산 몰수 당한” 우익측 동기의 협박으로 학교를 못간 나—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부친의 명예회복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신청하고 기다리는 나—“죽고 죽임당하는” 민족의 비극을 막고 “합집합”을 만들기 위해 현재 합법적인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드러나는 구술자의 생애사적 관점은 “나의 통일운동은 ‘집(家)의 복원’과 ‘민족의 복원’을 위한 생애사적 노력”으로 구조화된다.

이 사례에서 보여주는 가족주의의 특징은 “미완의 가족과 미완의 국가” 정체성으로 요약되며, 정치적·저항적 가족주의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계속해서 단절적으로 체험하는 앞의 사례들과 달리, 이충우 씨에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로 이어지는 과거 청산 및 제도적 민주화의 진전 과정은 가족과 국가의 의미를 동심원상에 존재하는 유기적 관계로 재구성하고, 정치적 자아(political self)와 가족적 자아(familial self)를 동시간대에 실현하는 행위공간으로 체험되고 있다. 이에 개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구술자에게 경합하는 타자이자 준거집단으로 존재했던 과거 정치 체험을 공유한 중학 시절의 관계망(network)을 들 수 있다.

4. 분석과 함의

이상의 사례들은 전근대적 계급관계를 단기간에 해체시킨 한국전쟁(정진상 2000)이 분단의 고착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이념적 신분제를 주형하면서, 1950년~70년대에 이르는 전후복구기와 반공규율사회를 거쳐 가족중심적 행위성이 중층적으로 구조화되는 발생적 과정을 드러낸다. 이 과정은 공식적·비공식적 배제와 차별의 체험뿐 아니라 현실 국가 및 정치에 대한 열망과 실망들, 좌절과 단절감 속에서 발현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한 사례들은 가족주의 ‘일반’을, 혹은 한국전쟁 관련 유가족들을 대표하는 사례가 아니며 유형적 사례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각 사례 가족생애사 및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구조와 관계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족을 통한 통치: 분할지배와 배제의 정치(exclusion of politics)

사례연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규율, 그리고 연좌제와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결합된 가족신분제를 매개로 ‘가족’이 정치적인 범주로 구성되는 사회적 과정들을 드러내준다. 앞의 사례들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생활세계를 가로지르는 ‘월북자 가족’, ‘빨갱이 가족’과 ‘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상이용사’ 가족으로 양극화된 신분적 정치가 단지 개별사례들의 체험에 국한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의 상징정치적 효과, 또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에서 찾아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른바 반공규율사회에서 국가가 의도했던 정상가족(the Family)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관계에서 작동하는 이성애 중심의 핵가족만이 아닌, “빨갱이가 없는, 가부장에 효(孝)하고 국가 가부장에게 충(忠)하는” 가족이었으며 “정치에 눈 감고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가족이었다.³²⁾

나아가 관행적인 신원조회와 연좌제, 민간사찰을 동반한 가족연대책

임구조가 가족희생 자본주의가 부과한 생계 부양의 질곡과 결합될 때, '가족'은 개인의 행위지평을 제약하고 무의식을 규율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안보국가의 행위공간에서 가족규율과 반공규율이 어떻게 묶여가는지를 드러내준다. 그 결과는—많은 연구들이 지적했던 바—사(私)적 영역이자 경제적 행위자로서의 가족, 국가 권력에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분할된 사회, “원자화된 가족 집단을 통해 가족만의 물질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Banfield 1958, 9-10) '가족주의'로 현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구술자들에게 1950년대~1970년대 초반의 시기는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의 '무대'로 이동해가는 행위공간으로 기능했다. 이는 김동호 씨의 언어를 빌리자면 “엑스트라”로, “우리 같은 사람들”로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근대성은 본래적으로 참여의 정치양식을 지칭한다(Broudieu 1995). 그러나 일등시민과 이등시민의 경계가 이념으로 구획되고 가족으로 위계화된 사회에서 국민적 참여가 생겨날 수 없으며, 정치의 영역에서 밀려나고 국가가 담당해야 할 경제적 복지 기능을 전적으로 떠맡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의 일원일지언정 '국민이면서 국민이 아닌 자들'로 살아간다.³³⁾

32) 박정희가 주창한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족주의'가 '충효사상'의 논리에 기반했음은 알려진 바 대로다. 박정희는 “동양사상의 근본은 충과 효다. 충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이고,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이다”라고 강조했고 거리마다, 건물의 정문과 벽마다 충효라는 글자가 쓰였다. 가부장에 대한 효는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확장되어 유신체제의 정당화로 이어졌다. 가부장에 대한 섬김은 국가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국가의 가부장인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논리를 정당화했다(이암하 2004, 45-47).

33) 버틀러(Butler 2008, 18)의 말을 빌리자면 이는 '정치의 영역을 빼앗기고 자연 상태로 귀환하는' 국가없음의 상태에 다름 아니다. 전쟁상태는 곧 피난사회다. 특히나 남과 북의 대치상태가 5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곳에서 내부 난민의 형성과 국민국가의 경계 내부로부터의 배제의 정치(politics of exclusion)는 최근의 현상만이 아닌 이미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문체는 지금 이곳의 정치 성원들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사회적 분할선이 역사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겹겹이 층화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나아가 가족과 출생과 같은 귀속적 지위가 사회적 재생산과 경쟁의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계급적 유대는 물론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유기적 연대도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하용출은 한국의 가족주의를 ‘남해안의 다도해’에 비유한다. 섬의 모든 것이 결합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사실상 서로를 고립시키며, 한국사회의 동질성과 단일성은 일종의 사기와 같다(Yong Chool Ha 2007, 379). 요컨대 탈정치화된 가족주의, 이른바 공공(公共)의 영역으로부터 이탈한 가족주의는 이념과 가족으로 분할된 국민형성과정과 시민권의 결과이며,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가족을 통한 통치’와 ‘가족에 의한 복지’³⁴⁾ 과정에 ‘재생산되는 가족주의’의 지배적인 원인이 있다.

2) 국가 정당성의 기여와 가족들의 정치(politics of families)

그러나 사례 연구는 정치적 배제, 폭력, 차별을 동반하는 일련의 ‘국가’ 체험을 매개로 가족구성원들이 가족 및 일차집단을 중심으로 자기정당화의 믿음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드러내준다. 단적으로 누구보다 정치적인 삶을 회구했던 김동호 씨의 생애사례는 전시에 체험한 국가 폭력만이 아닌 전후의 일상적인 폭력이 가족 내의 공간으로 침입하면서, 가족으로 다시 ‘회귀’ 되는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보여준다. 김동호 씨가 반복되는 국가폭력에 의한 가족사의 훼손을 계기로 이전에 갖고 있던 국가상(像)과 동형적 의미를 갖는 일종의 ‘대체국가’로 가족의 의미를 역전시켰다면, 박효광씨의 경우 이미 전쟁의 과정에서 동질적인 정치적 체험을 공

34) 장경섭(2009, 233-235)은 한국의 가족 복지 모델을 ‘가족을 위한 복지(welfare for the family)’ 또는 ‘가족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the family)’ 와도 구분되는 ‘가족에 의한 복지(welfare by the family)’ 로 지적한다. 1990년대 중반 (가족이 국가를 대신하는) 한국형 복지 모형과 가족에게 부과된 ‘기능적 과부하’가 일상적인 한국인들의 가족 피로로 귀결되었고, 최근의 가족해체 및 탈가족화 현상은 이러한 ‘한국가족의 정상위기’의 역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유한 모친을 도덕적 타자로 재구성하면서 사(私)적 집단으로 체험되는 ‘국가’로부터 가족을 보호/부양하고자 하는 가족중심적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보여준다.

기실 어느 사회에서나 생활공동체, 가구, 주거, 생애사적 궤적을 포함하는 총체로서의 ‘집’과 ‘가족’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반이자 행위의 준거집단일 것이다. 그러나 가족 및 친족집단이 전쟁 및 국가형성의 과정에서 ‘가시적인’ 국가폭력과 급격한 훼손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다양한 층위의 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심 원리가 될 때, 가족의 정치·경제·사회적 위상과 경계 또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해 도덕적 동일시와 정치적 동일시가 반드시 동일한 메커니즘일 이유가 없음에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공(公)을 상실한 연고주의 집단, 가족을 억압하는 사(私)적 집단으로 체험됨으로써, ‘국가’를 이탈한 정치·사회적 정체성은 일차집단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공(公)과 부조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족들의 정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효광 씨와 이충우 씨의 생애사례는 ‘군대’와 ‘지하행정’³⁵⁾ 등 일상적인 부패와 연고주의 국가 체험을 매개로 지연·혈연·학연 등 ‘연줄’을 중심으로 한 행위전략을 재조직하는 과정들을 드러내준다. 특히 군대의 체험 및 연좌제의 극복 과정은 ‘돈’과 ‘뺨’의 논리로 움직이는 지하행정의 원리를 체득하고 재동원하는 과정이기도 했다.³⁶⁾ 이들의 생애사례는 가족과 국가의 단절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가족중심적 행위지향이 다시 일차

35) 최장집이 지적한 대로 “법이 작동하는 국가기구, 국가행정과 법이 미치지 않는 지하행정, 법이 작동하는 경제와 법이 작동하지 않는 지하경제는 양자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고도성장권위주의적 정치를 지탱하였던 기본구조였으며 한국사회의 작동 원리였다”(최장집 1996, 291).

36) 그런 점에서 ‘군대’는 기존의 통설에서처럼 남성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체제 내로 포섭하고 편입시키는 장치였던 것만이 아니라, 현실 국가에서 작동하는 일상적인 규범과 부조리를 체득하고 간파하는 정치사회화의 장(場)이기도 했다.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생애전략을 구사하게 하면서 전사회적인 학연·혈연·지연의 확산과 맞물려가는 되먹임(feedback)의 사회과정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불평등한 시민권을 상쇄/보상하기 위해 개별화된 형태로 전개되었던 가족주의적 실천들은 전사회적인 가족 경쟁 체제의 확장과 궤도를 같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김동호 씨와 이충우 씨가 보여주는 문중, 고향, 일가의 복원 노력은 ‘축소된 가족주의와 확대된 가족주의’의 관계의 이면에 “탈정치화·탈계급화의 상황에서 권력, 화폐, 취직, 승진, 직위 등의 회소자원에 접근하고 도달하기 위한 이익단체의 기능”(강인철 2006, 396)과 더불어, ‘공식적인’ 정치적 장을 통해 실현되지 못한 자신의 정치적 열망과 협소한 사회정치적 행위지평을 대리하고 보상하는 기능 또한 자리했음을 지시해준다. 이는 가족적 국가를 대체할 시민 국가가 부재함을 반증하며, 국가 정당성 및 도덕성의 문제가 한국의 가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문제지점으로 자리함을 시사한다.³⁷⁾

3) 국민되기와 자기방어기제: 정상가족과 정상국가의 변증법

한편 가족사의 굴절이 국가에 의한 정치적·경제적 시민권의 제약과 동일한 과정이었기에 이들의 ‘집’의 재생산전략은 자신의 가족사적 전통을 한 축으로, 그리고 국가를 향한 인정투쟁을 한 축으로 구성하면서 국민됨의 ‘과도화’와 ‘허구화’를 낳는 역설을 초래했다. 국가에 의해 비(非)국민, 이등국민으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던 가족성원들에게 군인되기와 가족되기, 반공주의를 동반한 국민됨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37) 여기서 ‘도덕성’이란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의 공정성과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합의와 자발적 복종에 근거해서 지배할 수 있음을 말한다(김동호 1997, 39&91).

생존의 문제였다. 그러나 자기검열과 부인, 변조와 누락을 동반한 복합적인 심리기전은 반공 규율의 강고함을, 동시에 그 ‘균열’의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가족을 억압하는 국가를 스스로 욕망하게 되는’ 현상(이득재 2001)은 위로부터 동원된 가국(家國)이데올로기에 순응적으로 포섭된 결과만이 아니라, ‘억압적’ 국가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방어하고자 했던 자기방어기제와 정치적 성원권의 확보를 향한 인정의 열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병권(2008)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 삶이 송두리째 국가 권력에 맡겨져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들이야말로 주권을 실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국민되기 노력은 중의적이고 양가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편으로 ‘국가’와 ‘민족’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언술들은 자기방어의 레토릭이자 지배담론에 조응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민주적 반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³⁸⁾ 사례연구는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국민”됨을 강변하는 그 순간에 재구성되는 의미작용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김동호 씨가 “정치(政治)는 글자 그대로 평등하게, 바르게 잘 살아가자는 얘기”라고 말할 때, 박효광 씨가 “니가 정당성(正當性)이 있는 일을 저질러야지”라고 말할 때 그리고 이충우 씨가 한 번도 “국민(國民)으로서의 투표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할 때 모습을 드러내는—냉소와 체념, 복종의 정치문화로만 환원되지 않는—심층의 의미들은 ‘국가’가 가진 수많은 얼굴에도 불구하고

38) “민주주의는 항상 자기입법의 주체로 나설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를 함축”함으로써 정치적 성원권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국민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입헌적 자기창조의 진행형적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적 반추(iteration)’는 기존의 의미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권위 있는 선례까지 변형시킬 수 있기에 법생성적 정치학(jurisgenerative politics)으로 작용한다. 민주적 반추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법의 주체일 뿐 아니라 신민임을 재확인하고 재규정함으로써, 보편적 내용을 담는 입헌 활동과 민주적 제한이라는 역설 사이의 차이를 돌파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Benhabib, 2008, 207-211).

고, 국가의 중심적인 역할이 ‘정치’에 있으며 지금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통찰과 부정을 담고 있다. 달리 말해 절대화된 가족의 가치항 뒤에 숨어 있는 ‘국가—없음, 연고주의 국가, 분열된 국가, 미완의 국가’ 정체성은 국가가 정상가족을 가정하듯, 가족들 또한 정상국가가 작동하지 않을 때 다양한 국가/상태를 재구성하고 변형해가는 상호작용의 과정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이 지시하는 바는 비록 역사적으로 폭력과 동의가 아무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의’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국민되기 노력과 집(家)의 재생산전략은 정상국가³⁹⁾를 향한 열망을 담고 있는 국민됨(nationhood)의 재전유 과정이기도 하다. 요컨대 한국에서의 혈연과 연줄의 강화는 사회문화적인 동시에 정치경제적인 성격을 띠며(하용출 2001, 295), 가족주의는 통상의 근대 국가에게 부과된 정치적·경제적·도덕적 기능을 가족이 대체하면서 현상된 보상이념이자 만성적인 ‘국가불신’과 양면을 이루는 저항담론으로서의 성격 또한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5. 토론 및 전망

이 연구는 분단 현대사에서 배제·억압된 가족들의 체험과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한국 현대 사회의 가족주의가 강화·재생산된 과정과 원인을 국민형성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가족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39) 여기서 ‘정상국가’는 프랑스혁명으로 표상되는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인 주권 국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계약에 기반한 근대국민국가 및 민주주의 국가의 관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제9차 개정헌법)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가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시사한다. 한국 현대 사회의 가족주의는 유교 전통이나 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생존 전략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없고,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없음,’ 즉 국가성(stateness)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식민국가를 대체할 대안적인 국민국가의 건설이 굴절되면서 가족주의는 약화되지 않은 채 변형, 지속, 강화의 과정을 겪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도덕적·방어적·정치적·저항적 가족주의의 구성과정은 기존의 기능론적 관점이나 규범적인 도식으로 한국 현대 사회의 가족주의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들이 갖는 제한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곧 식민지 근대의 역사적 구성물로서 가족주의가 갖는 잠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이가 사례 연구의 결과는 ‘가족주의’가 왜곡된 국가가 정상화되는 국면, 즉 국가가 점차 그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적 권리의 확장과 국민정체성이 확립되어감에 따라 다른 사회적인 가치들과 공존할 수 있는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술자들에게 4·19의 열린 공간, 1987년 민주화, 1990년대 탈냉전의 흐름과 문민/국민의 정부가 수반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과 같은 정치 변동의 공간들은 기존의 행위지향에 변화를 가져오는 이행의 전기(轉機)로 작동했다. 그러나 김동호 씨와 박효광 씨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족주의는 “대안적인 정치적 타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시장 파시즘 및 정치적 보수주의와 같은—‘가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호명하는 정치담론과 접합되어 역방향으로 호명되는 잠재적 멘탈리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난과 국가보안법의 현존, 그리고 탈이념적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지배로 특징지어지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이어지는 행위공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회화’의 과정으로 체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적 수치나 무시당한 감정에 내포된 인지적 잠재력이 정치적·도덕적 신념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무엇보다

도 관련자들의 정치적·문화적 외부 조건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⁴⁰⁾ 그런 점에서 가족주의는 문화적 습속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습속이라 할 수 있으며, ‘가족주의’와 ‘국민형성’은 지속적인 변증적 관계에 위치한다. ~~이러~~

참고문헌

- 강인철. 2006.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윤해동·천정환 외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
- 강진웅. 2001. “남북한 체제변화와 가족주의의 변형에 관한 비교연구: 원자화된 가족주의와 세포화된 가족주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병권. 2008. “불안시대의 삶의 정치.” 연구공간 수유+너머.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다시 사회구성체론으로?』. 그린비.
- 권명아. 2000.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 김동노. 1997. “국가정당성 결여와 생활세계의 왜곡.” 『현상과 인식』 21권 1호. 71-96.
- 김동춘. 1997.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
- _____. 1998. “1950년대 한국 농촌에서의 가족과 국가.”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 _____. 2002. “유교(儒敎)와 한국의 가족주의—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치의 산물인가?”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제55권. 93-118.
- _____. 2006. “한국의 분단국가 형성과 시민권: 한국전쟁 초기 안보국가에서

40) 오직 사회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때에만 무시에 대한 경험은 정치적 저항 행위를 동기화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Honneth 1996, 233).

- ‘국민 됨’ 과 시민권.” 『경제와 사회』 통권 제70호. 169-260.
- 김명희. 2009. “한국의 정치변동과 가족주의의 재생산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 좌익 관련 유가족들의 생애체험을 통해 본 ‘가족’ 과 ‘국가’.”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범. 1989. “연좌제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미망.” 지승중 편.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왕배. 2009. “한국전쟁의 기억과 반공 보수성의 고착: ‘남정리’ 한 부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2집 1호. 39-80.
- 김진균 · 정근식 편저. 2003.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 노용석. 2004. “해방 이후 국가 형성 과정에 대한 지방민의 인식.” 『동향과전망』 통권 62호. 48-93.
- 박원순. 1990. “전쟁 부역자 5만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 여름호.
- 백낙청. 1994.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 양현아. 1995. “한국 가족법에서 읽은 세 가지 문제.” 한국사회사학회.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 _____. 2007. “1987년 이후 가족법의 변화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32권 단일호. 103-139.
- 윤형숙. 2000. “가족사를 통해 본 지방사.” 『한국문화인류학』 33권 2호. 172-201.
- _____. 2002.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집 2호.
- 이대근. 1987.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까치.
- 이임하. 2004.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해문집.
- 이득재. 2001.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 이택휘. 1980. “정치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도덕성의 발달과의 관련에서.” 『한국정치학회보』 제14권. 439-461.
- 이효재. 2003. 『조선족 사회와 가족』. 한울.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155-163.
- _____. 2006. “타자의 (재)구성과 정치사회화: 학생운동 참여자의 1990년대 생애체험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사회학』 제40집 6호. 226-260.
- 장미경. 2005.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제29집 6호. 159-184.
- 정진상. 2000. “한국전쟁과 전근대적 계급관계의 해체.” 『경제와사회』 제46호. 88-113.
- 조 은. 2006. “분단사회의 ‘국민 되기’ 와 가족.”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1호. 72-101.
- _____. 2008.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의 계급재생산: 가족사를 중심으로.” 2008년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 조희연 편. 2003.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 최장집. 1996.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 최우영. 2006. “조선시대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와 가족주의의 기원.” 『가족과 문화』 제18집 제1호 1-32.
- 최 현. 2006. “한국 시민권(citizenship): 1987년 이후 시민권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식.”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171-205.
- _____. 2003.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정체성과 시민권 제도.”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143-173.
- 하용출. 2001. 『한국 가족상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enocide.or.kr>). 200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nsil.go.kr>). 2009.
- Barrett, M., & McIntosh, M. 1994.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김혜경 역. 여성사.

- Banfield, E.C. 1958.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Benhabib, S. 2008. 『타자의 권리』. 이상훈 역. 철학과현실사.
- Brubaker, R., & F. cooper. 2000. "Beyond identity." *Theory and society* (29).
- Broudieu, P. 1995. 최종철 역.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동문선.
- Butler, J., and G. Spivak. 2007.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해연 역. 산책자.
- Collier, A. 1994. *Critical Realism: An Introduction to Roy Bhaskar's Philosophy*. London: Verso.
- Durkheim, E. 1998. 『직업윤리와 시민도덕』. 권기돈 역. 새물결.
_____. 1999. 『자살론 · 사회분업론』. 임희섭 역. 삼성출판사.
- Foucault, M. 1994.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정일준 편역. 새물결.
- Honneth, A. 1996. 『인정투쟁』. 문정훈 · 이현재 역. 동녘.
- Mead, G. H. 1962. *Mind, Self and Society*. C. W. Morris,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ttl. J. P. 1994. "The State as a Conceptual Variable." Hall. J. A., ed. *The State: Critical Concept*, Vol. I. London : Routledge.
- Pierson, C. 2003. 『근대국가의 이해』. 박형신 · 이택면 역. 일신사.
- Rosenthal, G. 2004. "Biographical research." in Clive Seal, et al., eds.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Sage. 48-64.
- Volter, B. 2000. "Intergenerational Dialog in Families of Jewish Communists in East Germany: A Process-Oriented Analysis." *Biographies and the Division of Europe*. Leske + Budrich: Opladen.
- Ricoeur, P. 2004. 『시간과 이야기 3』. 김한식 역. 문학과 지성사.
- Rokkan, S. 1975. "Dimension of State Formation and Nation-Building." In Charles Till, ed. *A Possible Paradigm for Research on Variations within Europe*.

Turner, B. S. 2001. "The Erosion of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2): 189-209.

_____. 1997.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용석 · 박철현 역. 일신사.

Ha, Yong Chool. 2007. "Late Industrialization, the State, and Social Change: The Emergence of Neofamilism in South Kore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10).

투고: 2009.10.15 심사: 2009.10.30 확정: 2009.11.13